백혈병·소아암 및 난치병 환아에게
희망을 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소아암협회
환아등록 및 후원문의 064-752-3300

한라일보

漢拏日報 제10719호 제주의 대표 신문 ihalla.com 기사제보 750-2200 | 구독 750-2314 | 광고 750-2828 | 2026년 11월 6일 금요일(음력 9월 27일)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2026 제주올레 걷기축제 '2026 제주올레 걷기축제' 개막일인 5일 올레꾼들이 제주시 조천읍 제주올레 19코스를 걷고 있다. 올해 축제는 "올레길에서 행복하라"를 슬로건으로 7일까지 제주올레 19코스와 20코스에서 진행된다. 연합뉴스

수소버스 민간 보급 '엎친 데 덮친 격'

세제혜택 조기 폐지 방침에 16개 지자체 공동 대응
개정안 통과시 내년부터 6000만~7000만원 추가 부담
도, 기후부 보조금 증액 추진… 실현 가능성 미지수

열악한 충전 인프라와 높은 구매 비용으로 인해 제주지역 내 수소버스 민간 보급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수소버스에 대한 세제 혜택마저 조기 폐지하기로 하면서 제주도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는 세제혜택 유지를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와 서울시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9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공급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소·전기를 연료로 쓰는 친환경버스 중 시내와 마을을 오가는 공공 노선에 투입하는 버스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왔다. 부가가치세는 차량 가격의 10%다.

당초 친환경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은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였지만 지난 8월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이 혜택을 올해 12월 31일자로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이어 일사천리로 한 달 만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의 수소버스 민간 보급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도내 전기버스는 390여대로 점유율이 50% 가까이 되지만, 수소버스는 지난 2023년부터 보급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24대 도입에 그쳤다. 이마저도 14대는 제주도가 구매한 관용차량이고, 순수 민간회사가 구입한 것은 10대에 불과하다.

보급이 저조한 이유로는 높은 구매 비용 등이 꼽힌다.

수소버스 대당 가격은 6억~7억원 수준으로 전기버스에 비해 2배 가량 높다. 구매 보조금으로 제주도와 정부가 국비와 도비를 합쳐 3억5000만원을 지원하지만, 민간업체에게는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도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수소버스가 연료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곳은 2023년 10월 영업을 시작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버스회차지에 조성된 수소 충전소 1곳뿐이다. 지난해 9월 제주시 도두동에 규모가 작은 이동형 충전소가 문을 열었지만 안전을 우려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는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에도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지만 영업은 빨라도 내년 6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런 와중에 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해택까지 폐지되면 민간에선 내년부터 6000만~7000만원의 추가 지출을 감당해야 해 보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되는 몫만큼 보조금 상향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부처가 정부 발의 개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기후부가 보조금 증액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다해도 실제 예산안에 반영하려면 기획예산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자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도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폐지되면 보급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하기 위해 지자체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제주-중국 미래산업 협력 확대 모색

도, 한중 미래발전 제주-중국 교류주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지방정부와 미래산업 협력 확대를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 '2026 한중 미래발전 제주-중국 교류주간'을 열고 중국 지방정부와 미래산업 및 경제·문화관광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제주도는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주제주중국총영사관과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개막했다.

행사에는 위성곤 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내 주요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진건군 주제주중국총영사를 비롯해 중국 지방정부 관계자와 미래산업 전문가 등이 함께했다.

이날 위성곤 지사는 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차담을 갖고 제주~칭다오 화물항로 활성화와 미래산업·관광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중 수교 34주년을 맞아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제주-중국, 협력으로 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마련됐다.

미래산업 세미나에서는 바이오,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 둘째 날인 5일에는 중국 측 참가자들이 해녀박물관과 성산일출봉, 서복전시관, 정방폭포 등을 방문해 제주의 역사·문화와 자연유산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태윤기자

제주 물관리·물산업 국제협력 본격화

제주도, 아시아물위원회 이사회서 회원기관 승인
업무협약 통해 물관리 국제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물관리·물산업 분야 국제협력을 본격화한다.

제주도는 아시아 최대 물 협력기구인 아시아물위원회(AWC)의 정식 회원기관으로 가입하고, 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4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시아물위원회(AWC) 이사회와 부대행사에 참석했다.

아시아물위원회는 27개국 187개 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지역 물 협력기구이자 세계물위원회(WWC) 이사기관으로, 아시아 지역의 물 관리 정책·기술 교류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3년마다 아시아국제물주간을 개최하고 있으며, 메콩강 유역의 물관리와 중앙아시아의 기후재해 대응 등 현장 중심의 물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도는 이번 이사회에서 다른 6개 기관과 함께 새 회원기관으로 승인받았다. 이어 아시아물위원회와 '물관리 국제협력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와 시범사업 발굴, 아시아 지역 물복지 향상, 국제행사 협력, 교육·연수와 기술정보 교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협력은 지난 3월 제주물 세계포럼에서 논의된 국제협력 확대의 후속 조치다.

도는 위원회의 국제 연결망을 활용해 해외 물관리 정책과 기술을 제주 실정에 접목하고 공동사업을 발굴하며, 제주물 세계포럼의 위상을 높이고 주요 물 관련 국제행사의 제주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